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배경 및 목적

- 복지혼합 차원에서 사회복지 공급의 한 축으로 제3섹터 조직에 대한 기대 증대
 - 최근 우리사회에서 복지국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서 국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증가하면서, 이들 제3섹터 조직이 사회복지 공급의 한 축으로 역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공공의 복지 사업을 대행하는 비영리민간조직 이외에 지역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3섹터 조직들이 나타나고 있음.
- 제3섹터 조직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보 미흡
 - 영국은 1990년대 후반 들어 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 제3섹터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이들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함. 그러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제3섹터 조직의 활동 내용과 특성, 규모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에 봉착함. 우리도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복지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조사와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서울의 제3섹터 조직의 특성과 복지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사회의 제3섹터 조직 발전과 복지활동에 대한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제3섹터의 범위

—이 연구에서 제3섹터 조직은 비영리민간조직과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함함. 비영리민간조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된 단체를 기준으로 파악함.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함. 마포구 사례 연구에서는 법적 지위가 없거나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였고, 사회적 경제 조직도 공공으로부터 인증·지정·인가를 받지 않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함함.

○ 연구방법

—서울시 소재 제3섹터 조직 규모와 현황은 행정내부자료 및 시민단체 자료를 수집하고 엑셀프로그램으로 DB를 구축하여 분석함. 비영리민간조직 규모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내부자료,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등재된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함. 사회적 경제 조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함.

—마포구 제3섹터 조직 사례연구는 제3섹터 조직 대표자 및 실무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주로 이루어짐. 전화 인터뷰와 이메일 인터뷰 조사를 한 단체도 각각 1개임.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심층면접조사 전 과정을 녹취하였고, 녹취자료를 글로 풀어 자료로 활용함.

3. 제3섹터 규모와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증가

—서울에는 2011년 약 3,691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62.1%가 2000년대 이후 설립된 단체이며, 최근 5년간(2006년~2011년) 단체수가 1.6배로 증가함.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09년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2010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원사업 등의 사회적 경제 육성정책에 힘입어 서울에는 약 640개의 사업적 경제 사업체가 활동하고 있음. 이 중 중복 단체를 제외하면 서울에는 약 4,219개의 제3섹터 조직이 활동하고 있음.

○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 참여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분야는 보건·복지·장애 분야가 16.8%로 가장 높으며, 자원봉사 분야는 6.2%로 나타남. 한국민간단체총람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도 서울 소재 민간단체의 활동분야 중 복지 분야가 20.8%로 가장 높고, 자원봉사 분야는 4.8%로 조사됨. 비영리민간조직의 약 20%가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목적으로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비영리민간단체와 다른 방식으로 복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자치구별 제3섹터 조직 분포

—자치구별 비영리민간조직 및 사회적 경제 조직 분포에 차이가 있음. 비영리민간조직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종로구로 서울시 소재 단체의 17.2%(626개)가 입지했고, 이어 중구 8.1%, 마포구 8.0%, 영등포구 7.1%, 서초구와 강남구 각각 6.5% 순으로 많음. 비영리민간조직이 가장 적게 분포한 자치구는 중랑구 0.9%, 금천구 1.0%, 도봉구 1.1% 순임.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 조직 분포를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장 많은 구는 마포구(70개)로 서울시의 11.0%를 차지함. 이어 종로구(9.5%), 영

등포구(7.8%), 강남구(5.6%), 중구(5.5%) 순으로 많이 입지하고 있음.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랑구(1.9%), 동대문구(2.0%), 성동구(2.0%), 강북구(2.2%), 양천구(2.2%), 도봉구(2.3%), 강동구(2.3%), 금천구(2.3%), 서대문구(2.8%), 동작구(2.8%) 순으로 나타남.

4.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유형과 특성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비중이 낮음

—마포구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기반형 단체 비중이 낮게 나타남. 제3섹터 조직을 활동영역 기준으로 광역형(수도권, 전국), 지역기반형(마포구)으로 구분하여, 공식자료(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민간단체총람, 행정내부자료)를 활용한 경우에는 지역기반형 단체가 7.3%, 광역형단체가 92.7%로 나타남. 앞의 공식자료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연구에서 찾아낸 단체를 포함하면 지역기반형 단체가 12.1%, 광역형 단체가 87.9%로 나타남. 이는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단체 비중이 낮은 것을 보여주는 한편, 공식자료로 지역기반형 풀뿌리단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의 유형과 특성

—조직 설립과정과 주체에 따라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은 다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첫 번째 유형은 공동육아협동조합 등의 자조활동으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지역주민단체로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조마을공동체형으로 부름. 두 번째 유형은 마포구민, 마포구 소재 노동조합, 시민단체, 진보정당 당원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가하여 지역운동 차원에서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여기서는 지역운동형으로 일컬음. 세 번째 유형은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지원을 받아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 등 기존 주민자치조직에서 별도의 단체를 설립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형으로 부름. 네 번째 유형은 평생교육기관 운영자와 성인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기관부설형으로 일컬음.

○ 조직유형별 네트워크와 활동방식

- 자조마을공동체형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 한 지역에서 십여 년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조직 활동을 주체적으로 해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조직은 물론 공공과 광역형 비영리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음. 광범위한 관계망을 토대로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은 마포구 내 제3섹터 조직의 허브 기능과 지원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음. 네트워크 내용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강도 높은 협력관계 수준에 이름.
- 지역운동형은 최근 1~3년 사이에 단체 활동을 시작하였고, 단체의 법적 지위가 없어서 공공사업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 여타 단체들과 관계망 구축에 적극적이며, 민간재단의 기금공모사업에 참여함. 지역운동형 조직은 지역 활동 경험이 축적된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으로부터 단체 운영 노하우(know-how)나 자금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함.
- 주민자치위원회형은 주민자치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망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와 네트워킹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 여타 제3섹터 조직과의 교류는 없음.
- 기관부설형은 단체의 모태가 된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회원 충원이 가능함. 단체 활동 핵심이 취약계층에 성금 전달과 자원봉사이므로 지역복지시설과 주민자치센터와는 교류가 있으나, 지역의 여타 제3섹터 조직과의 교류는 없음.

5.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 기여 및 한계점

○조직 유형별 복지활동 특성

- 자조마을공동체형은 주민들이 수평적·자조적 방식으로 보육과 돌봄, 교육, 보건, 문화 등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자체 공급하고 있음. 이런 자조적 복지활동이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감. 또한 단체 복지사업 방향으로 상호적 복지활동을 강조하고,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 주민 대상의 복지활동을 명시하고 있음.
- 지역운동형도 수평적·자조적 방식의 복지활동을 지향하고 있음. 방과 후 돌봄과 같은 일부 서비스는 제도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공공과 역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일반주민, 노인, 청년1인가구, 아동·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으로 다양함.
- 주민자치위원회형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식사 대접과 반찬 배달 사업을 하고 있음. 기관부설형은 저소득층 노인 식사 대접 외에 저소득층 성금 지원, 장애인복지기관 후원 등의 자선적 복지활동에 초점을 둠.

1) 복지활동 기여와 역할

○복지영역의 확대와 시너지 효과

- 제3섹터 조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이외에 최근 몇 년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증가하면서 복지공급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있음.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수익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복지사업을 후원하거나, 수익금으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함.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제3섹터 조직들이 사회복지 분야 단체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주거와 에너지복지사업,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영역이 확대되고 복지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

○제도 복지 보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성

—제3섹터 조직은 공공과 달리 정해진 규정이나 제도에 크게 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복지활동 및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복지활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사회통합 매개 역할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은 취약계층의 물질 결핍 해소 이외에 취약계층을 지역사회로 불러내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지역사회 특성과 틈새 복지수요에 대처

—지역사회 수요가 있으나 제도권 복지에서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음.

2) 복지활동 한계점

○장시간 지속성을 요하는 돌봄 복지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제3섹터 조직의 취약계층 대상 교육, 상담, 의료, 급식, 집수리, 문화 사업은 주민 자원봉사로 해결할 수 있음. 그러나 장시간에 지속성을 요하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제3섹터 조직에서 품앗이나 자원봉사방식으로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거동이 힘든 재가노인 돌봄은 장시간 노동에 노동 강도가 높고 보육이나 방과후교실과 같은 돌봄서비스에 비해 1인당 돌봄 비용이 높아 제3섹터 차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복지서비스로 파악됨.

○서비스 중단 가능성

—주민 재능기부 및 기금사업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그만두거나, 기금지원을 받지 못하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상근인력 및 재정 제약으로 서비스 규모의 한계

— 상근활동자가 대부분 1명이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제3섹터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규모에는 한계가 있음.

3)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 공공부문

—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정책이나 공무원을 통해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설립과 운영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제3섹터 조직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함.

○ 공공지원 비영리기관

— 공공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들은 다양한 유형의 제3섹터 조직을 네트워킹하는 허브 기능과 지원 역할을 하고 있음.

○ 광역형 비영리민간단체

— 광역형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역사회 내 제3섹터 조직 설립을 지원하거나, 지역운동 차원에서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들과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과 같은 별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재생산하고 있음.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소규모지역단체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6. 정책 제언

—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발전과 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차원

에서 정책 제언을 함. 먼저 서울에는 마을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형성과정에서의 공공 역할에 대한 제언을 함. 이어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활동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공공 협력시스템에 대한 제언을 함.

1)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형성과 공공의 역할

○공공 지원의 필요성

—제3섹터 조직에 대한 공공의 관여와 지원이 제3섹터 조직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과 제3섹터 원동력인 자발성을 약화시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음.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은 주민생활과 지역의 문제를 자치와 상호호혜, 협력에 기반하여 해결해 나가는 마을공동체 형성의 매개 역할을 함. 서울의 경우 기존 주거지와 주민을 해체시키는 개발사업이 도심 전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물적 기반을 약화시켰고, 이는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마을공동체 형성의 매개역할을 하는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서울의 상황에서 제3섹터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공공의 관여와 지원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봄. 마포구 사례연구에 의하면 지역단체 설립에 학습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한 예로 성산1동 성미산마을을 중심으로 십여 년 넘게 축적된 주민단체 활동과 성과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학습효과를 통해 마포구에 새로운 제3섹터 조직 형성에 영향을 줌.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설립에 학습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공이 학습효과 확산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지역사회 특성과 조직유형별 지원전략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는 지역 특성과 조직 유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확충 및 지원전략을 취할 수 있음. 첫째, 시민단체가 없거나 주민활동이 약한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이 기존 주민자치조직을 지원하여 새로운 조직 설립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음. 기존 주민자치조직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제3섹터 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경우,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주민들 간 교류가 촉진될 가능성이 커짐. 복지수요가 많으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활동도 미흡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기존 주민자치조직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단체를 파생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공공(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주민자치조직 위원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여타 지역사회의 제3섹터 조직 활동 모범사례 소개, 강좌, 탐방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것임. 교육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주민 조직 설립단계에서는 조직의 법적 형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부터 공간 지원, 활동자 리더십 교육과 운영 컨설팅 등까지의 지원사업을 함.
- 서울시가 주민자치조직위원이나 주민 대상의 교육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자치구나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 파견과 교육사업을 함. 서울시는 단체설립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직의 법적 지위와 요건에 대한 상담, 활동자 교육, 운영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병행함.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지역기반형 제3섹터 설립 관련 주민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주무부서가 되어 행정국 행정과와 협력하여 이들 사업을 추진함.
- 둘째,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이나 문화·복지시설을 전략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있음.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시설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이것이 동아리나 단체 결성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음.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에 대

한 주민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가 단체 결성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자치구는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시설이 제3섹터 조직 결성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자치구는 관내의 지역사회 시설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민조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 서울시와 자치구는 단체 형성을 위해 시설 운영자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셋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제3섹터 조직들이 파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두레(일본에서는 워커스 컬렉티브(workers' collective)로 부름)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복지활동을 하거나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나타남. 『협동조합기본법』이 2011년 제정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서울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제3섹터 조직이 파생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서울시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또는 연합회)은 새로운 제3섹터 조직(두레, 워커스 컬렉티브,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는 홍보·교육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서울시는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음.

2)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과 공공의 협력체계

○ 제3섹터 조직과 공공의 복지활동 대상자 차별화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제도권 복지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나 물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리고 지역사회 수요가 있으나 제도권에서 대응하거나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제도권 복지의 보완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

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 기준의 엄격성과 경직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많은 현 상황을 고려해 공공과 제3섹터 조직의 복지수혜대상자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자치구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과 협의하여 제3섹터 조직이 복지활동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을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함. 자치구는 제3섹터 조직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함. 법정계획인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과 자치구의 복지활동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고 복지자원 동원계획과 함께 배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이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한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제3섹터 조직과 공공의 복지서비스 공급 차별화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이 제공하기 용이한 복지서비스와 그렇지 못한 서비스가 있음. 교육·문화사업, 상담, 일시 의료, 급식, 집수리 지원사업은 주민 재능기부를 통해 제3섹터 조직에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임. 반면 장시간 반복적이고 지속성을 요구하는 돌봄서비스는 제3섹터 조직이 자원봉사로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돌봄서비스 중에서 제3섹터 조직이 자원봉사로 무료로 특히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와병 중인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로 나타남. 무료 방과 후 보육서비스의 경우 2명의 상근교사가 약 20여명의 아동을 공동공간에서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 1인당 투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제3섹터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 재가와병노인 돌봄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명이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1명의 노인을 장시간 돌보야 하는 노동 강도가 높은 서비스이므로, 노인 1인당 투여비용이 높음.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자부담을 못해 요양보호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제3섹터 조직이 자원봉사나 후원금만으로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복지서비스 유형에 따른 공공과 제3섹터 조직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은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로 제공이 가능한 교육, 문화, 상담, 급식, 집수리, 멘토링 등의 서비스 또는 비용 부담이 가능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따라서 공공은 자원봉사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이 큰 재가노인 및 재가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복지에 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공공의 홍보 및 만남의 장 매개 역할

-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은 주민의 후원과 참여로 운영됨.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에 대한 홍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제3섹터 조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음. 그러므로 자치구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의 위치와 활동을 소개한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배포함.

- 2011년 마포구 요청으로 마포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시도한 제1회 나눔페스티벌처럼 관내의 제3섹터 조직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이 있음. 협동조합의 날, 사회적기업 주간에 사회적 경제 조직과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 제3섹터 한마당을 개최하여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제3섹터 조직 간 네트워크 사업의 지원

-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들은 상근인력과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음. 이런 제약조건에서 활동성과와 지역사회의 복지활동과 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 간 정보 및 자원공유,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나 자치구는 제3섹터 조직이 정례적으로 만나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모임이나 만남의 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서울시나 자치구는 제3섹터 조직 간 네트워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복지·문화·교육 시설과 제3섹터 조직들이 주관할 수 있음.